

## 10 오피니언

## 사설

## 학생설계전공 점검 필요하다

취업난은 학생들로 하여금 취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전공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고 있다. 문과학생 중 상당수는 경영 혹은 인접 전공으로의 전과나 복수전공을 한 번쯤 고민한 눈치다.

꼭 취업이 아니더라도 최근 학생들이 자기 전공 외에 한두 개쯤 복수전공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트렌드에 가깝다. 각 대학은 추세에 맞춰 다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 다양한 학사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별한 학문적 관심을 지닌 학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수월하게 다양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우리학교 역시 다전공이나 융합전공 제도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학생이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이수하는 ‘학생설계전공’이 도입된 이유 역시 위와 같은 배경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이 제도는 시작부터 이해당사자 간의 불만, 상대적으로 허술한 절차 등으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지난 학기, 이 제도와 관련해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학생들이 설계한 커리큘럼에 관련 학문 전문가가 참여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일례로 경영학 전공을 승인받은 학생의 설계 과정에 경영학 교수는 부재했으며 해당 학생의 교육과정 중 절반 이상이 경영학 과목이었지만 지도 교수 역시 경영학 교수가 아니었다. 심지어 내부심의 과정에서도 경영학 관련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직접 설계한 커리큘럼의 수준과 적절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시행 두 번째 학기를 맞아 이 같은 상황은 해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와 관련된 잡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본전공·복수전공자와 학생설계전공자 간의 불균형도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정 학문의 경우, 본전공·복수전공자에 비해 유독 학생설계전공 학점 기준이 높아 제도 본래의 취지를 흐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질적인 문제도 불거진다. 다전공이나 연계전공 시행 때도 늘 있어왔던 것처럼 일부 인기 학과에 수요가 몰려 본전공생을 포함한 수강 희망 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예산 등의 문제로 강의 확충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학생설계전공자 수요까지 몰리면, 더 큰 어려움을 불러올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따라서 대학은 지금이라도 학생설계전공 자체의 개선은 물론 이 제도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강의 수요를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게끔 관련 여건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학생설계전공의 학위 수여 기준을 다시 손보고 입학정원이 아닌 다전공과 학생설계전공자의 정원에 맞춰 각 학과의 예산과 교·강사 정원을 배분할 필요도 있어보인다.

아무리 좋은 제도여도, 학생이 수강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고 학생설계전공의 대상이 된 특정 전공이 이로 인해 피해를 본다면 두고두고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다.

현재 학생설계전공에 일부 단과대학 행정실은 난색을 표하기도 한다. 제도 시행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이해와 설득 과정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겠지만 공간과 예산, 인력의 현실적 한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시작한 결과물일 수도 있겠다. 일부 단과대의 불만이 전체 단과대로 확대되기 전에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 세시봉

## 현실과 투표

유경민 기자  
gmni0313@khu.ac.kr



대학마다 총학생회(총학) 선거가 바쁘게 진행됐다. 우리학교 총학 선거 투표율은 54.31%를 기록했다. 지난 제54대 총학 선거보다는 높아졌지만, 절대 수치만 보았을 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다른 학교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울대학교 총학의 경우 연장투표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개표 가능 투표율인 50%를 간신히 넘겼다. 성균관대학교와 중앙대학교 등 일부 대학들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투표 참여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낮은 투표율은 취업난·진로 고민 등 대학생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현실이 어렵다 보니 학생 자치에 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현실과 투표 사이에 깊은 간격이 있다는 전제가 깔린다. 투표 참여만으로는 마주한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낮은 투표율 문제는 학생회 선거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있었던 21대 총선의 경우 투표율이 66.2%에 그쳤다. 물론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사전투표를 하며 투표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투표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권리행사’라는 명분을 강조해온 시간을 생각해보면 참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만족할만한 수치는 아니다.

결국 낮은 투표율의 근본 이유는 현실과 투표 사이의 괴리다. 후보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하지만 ‘한 표’의 의미에 대해 후보와 유권자 간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당장 현실에 이득을 주지 않는 투표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한다. 이에 투표 이벤트를 통해 물질적인 것을 안겨주며 괴리를 좁히고자 하지만 역부족이다.

투표는 취업준비생, 수험생으로서 선택당하는 것이 일상인 현실에서 주체적으로 결정력을 가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부분이다. 많은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투표의 영향을 받는다. 참여하는 순간부터 투표는 본인의 현실 속으로 들어온다. 합격에 대한 기대만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만으로도 투표에 참여해 결정권을 행사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학생에게 와닿지 못하는 대학 ESG 정책, 개선 필요해

## 우물 안 대학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국내 대학들이 강조하는 ESG 정책이 정작 대학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와닿지 못하고 있다. 현대의 정치·경제·사회·환경적 취약성을 고려했을 때 대학의 책임은 막중하다. 하지만 국내 대학의 실상을 보면 위기에 처한 지구와 인류의 미래에 최선의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내 대학들은 환경부와 함께 그린캠퍼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ESG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주변에서는 ESG를 처음 들어본다는 학생도 존재했다. 학내 구성원조차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에 실천 의지를 보이고 있는 해외 대학의 사례를 제언한다. 하버드대는 작년 9월 ‘기후와 지속

가능성 부총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었다. 일종의 전담부서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하버드대는 2026년 캠퍼스 탄소중립을 선언하기도 했다. 예일대 또한 기후 문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2035년 캠퍼스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두 대학은 기후 문제를 연구나 교육 전반에 접목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 개인에게 있어 고등교육을 받는 이 시기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다. 그렇기에 학생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진정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익히는 과정은 지금 당장 수행돼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생존조차 어려운, 말 그대로 ‘살기’ 힘든 세상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 교육은 이에 응답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지녔다. 국내 대학은 보여주기의 ESG 정책을 멈추고, 기후위기에 대한 실천적인 의지로 구성원들을 먼저 설득해야 할 것이다.



만평 대학 ESG 경영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균태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이동건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mailto: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퍼먼디